



##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진도**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대표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강의 기적, NICs(신흥공업국),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등…….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들었던 칭송이다. 경제성장으로 우리는 아시아 최빈국에서 오늘날 일인당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는 매우 낮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삶의 만족도는 꼴찌 수준이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N포세대로 불리는 이런 나라에 미래는 없다. 세계 최저인 합계출산율(2018년)은 1명 이하로 떨어졌다. 행복을 위한 기본적 공동체인 가족은 해체되고, 이웃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을 흡수한 괴물로 변했고,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30년 안에 전국 읍·면·동의 40%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성장과 행복의 괴리,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순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왜 우리는 성장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경제성장지상주의를 맹신하여 경제성장을 위해 삶의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할까.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경제성장지상주의에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성장

의 과실을 독식하는 재벌 대기업과 그에 기생하는 관료와 언론, 정치인과 학자들이 국민의 성장 증득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현인들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살고,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유엔은 2011년 총회에서 “국내총생산(GDP)은 그 성질상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행복을 위한 전체론적인 발전(holistic development)을 결의하고, 2012년 6월 세계 행복의 날(매년 3월 20일)을 제정하였다.

반년 전인 지난 4월 11일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 200여 명이 뜻을 모아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 창립하였다. 창립 선언문에서 “성장주의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경제 성장에서 사람 행복으로, 나라 발전의 목표를 대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 실행하고자”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총행복의 ‘총’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 ‘총’은 모든 분야의 균형 발전이라는 다차원(multidimensional)의 의미를 담고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과 함

께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고,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 둘, ‘총’은 모두의 행복이라는 집단 혹은 공유(collective)의 의미를 담고 있다.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더불어 행복’이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경제성장주의는 기본적으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성장으로 처음에는 소수의 부가 증대하지만 이윽고 그것이 흘러넘쳐 나머지 사람들도 잘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 시기의 ‘선성장-후분배론’이 그 전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수효과 이론은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었다. IMF 위기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은 4배 가까이 증대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강화된 반면에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 둘의 차이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

리 측면에서 살펴보자.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그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노동 조건의 격차인데, 이는 그동안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정책을 펴다 보니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광역시에서조차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성장 중심이 아니라 평등, 지역 균형이라는 가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학력 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여전히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학력 간, 남녀 간 노동 조건의 격차 등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성장도 방점이 성장이 아닌 국민총행복, 즉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에 찍힐 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국민총행복은 다차원적이고 집단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건강, 교육, 주거, 노동, 환경, 문화, 복지권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총행복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실질

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지역에 살고 있다. 지역은 일터와 삶터를 통하여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사회적 신뢰가 쌓이거나 파괴되는 공간이다. 빈곤·실업·주거·문화·환경이 가장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이고, 행복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조건(일자리·소득, 건강, 보육·교육, 여가·문화, 환경, 가족·공동체, 안전·안심, 주관적 웰빙)이 지역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치단체 40여 곳이 참여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10월 17일)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국민총행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지수를 조사,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가, 어느 부문과 어느 지역에서, 왜 아직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찾아 맞춤형 정책을 궁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해 반드시 행복영향심사를 해야 한다. 행복영향심사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부탄이다. 부탄에서는 22개 지표를 사용하여 모든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총행복 영향평가를 한다. 각 지표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 결과 평균 3점이 넘어야 정책이 채택된다. 평균 3점이 넘더라도 특별히 점수가 낮은 분야가 있으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행복영향심사제도 때문에 부탄은 아직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가 성장을 위해 WTO 가입을 부단히 요구하고 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WTO 가입이 국민총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될 형평성, 성 평등, 스트레스, 부패, 자연, 문화 등과 관련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는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하위 수준이고, 특히 공동체 부문은 영(0)점을 받아 꼴찌이다. 각자도생의 외톨이 사회로 전락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 항목은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공동체 부문의 점수가 높은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무너진 가족공동체, 지역(마을)공동체를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과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과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국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반드시 필

요하다. 세금은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을 부유세라고 명명해서 가진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행복세’ 신설을 위한 시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위라벨(일과 생활의 균형)’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